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2-6】

2012. 4. 2.

고소득국가 진입을 위한 중국의 신 성장전략과 시사점

목 차

I. 중국경제의 성장방식 전환 필요성	1
II. 향후 중국경제 트렌드와 신 성장전략 ...	5
III. 시사점	10

작성: 조사역 강수연 (3779-5716)
sykang@koreaexim.go.kr
확인: 연구원 김주영 (3779-5714)
jykim@koreaexim.go.kr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눈부신 성장을 바탕으로 2010년 중소득 국가로 진입함. 이하에서는 2012년 2월 세계은행(World Bank)이 중국 국무부 산하 발전연구센터(Development Research Center)와 함께 발표한 성장전략 보고서 "China 2030: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High-Income Society"를 기초로 향후 20년간 고소득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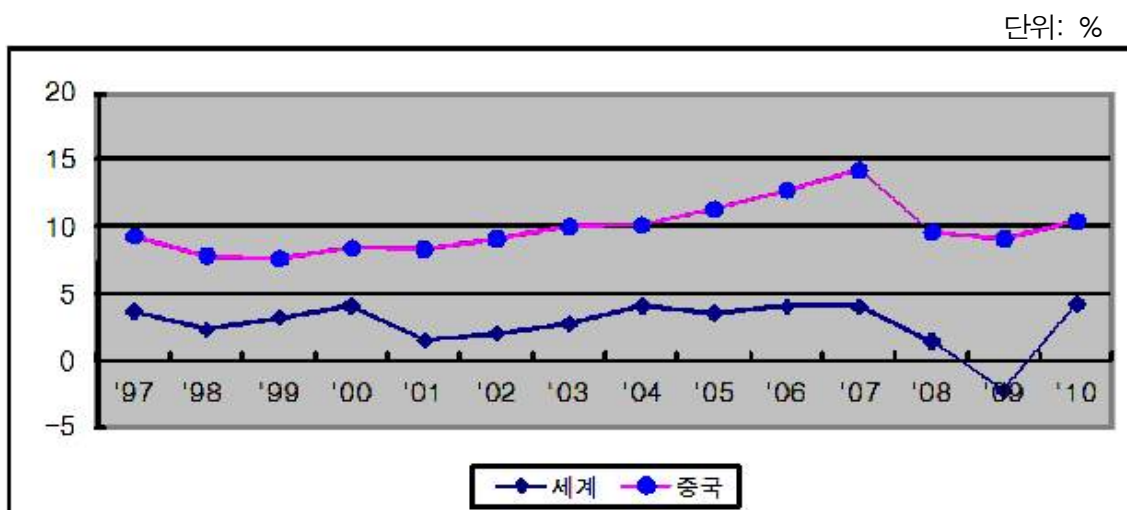
I. 중국경제의 성장방식 전환 필요성

1. 중국경제의 성과

□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

- 중국의 GDP 규모가 2010년 5조 8,800억 달러로 일본의 5조 4,600억 달러를 추월하여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
- 1979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9.9%의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며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 역할 수행

<표>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IBRD.



□ 세계 1위 제조업 생산국

- 개혁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로 중국은 2010년 제조업생산 점유율 19.8%(2조 1,344억 달러)를 기록하며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제조업 생산국으로 도약
- 조강, 자동차, 비철금속, 전자, 기계 등 분야에서 생산 세계 1위

□ 세계 1위 수출국이자 2위 수입국

- 풍부한 노동력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세계의 제조업 생산기지로 발돋움
- 2010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출국이 되었으며, 수입은 미국을 이어 2위

2. 성장방식의 전환 필요성

□ 환경오염 심화와 처리비용 증가

-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이 2011년 기준 GDP의 5~6%(3,900억~4,400억 달러)에 달해, 오염처리 비용도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 호수와 저수지의 75%가 부영양화, 도시지역 수계 90% 오염, 지하수의 40% 심각한 오염 상태
 -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연간 미국의 1.4배에 달하는 77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 현재 중국은 세계 1위 석탄소비, 세계 2위 원유 소비국
 - 도시별 미세먼지가 38~150 μm 달해, 인도(36-251 μm), 이란(70~372 μm), 파키스탄(181~251 μm), 몽골(279 μm) 등과 함께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



<표 1> 중국의 환경오염 처리비용의 GDP 비중 추이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비중(%)	1.0	1.1	1.2	1.2	1.3	1.3	1.4	1.5	1.3	1.7

자료: 중국 국토자원부.

□ 불균형 성장으로 지역 간 소득격차 상존

○ 동부 연해지역 중심의 발전으로 지역 간 소득격차 여전

- 동부 및 중부지역 소득이 서부지역 소득의 2.02배, 1.18배('86)에서 2.13배, 1.24배('10)로 증가

○ 다만, 2000년 이후 중국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소득격차 점진적 완화

<표 2> 중국의 지역별 1인당 GDP와 서부지역 소득 대비 소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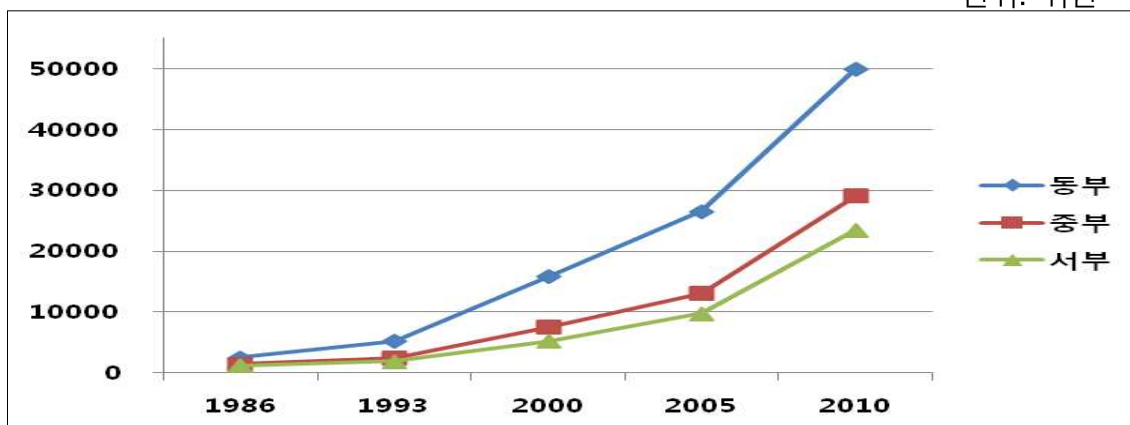
단위: 위안

	1986		1993		2000		2005		2010	
동부	2,536	2.02	5,280	2.75	15,885	3.01	26,616	2.71	50,026	2.13
중부	1,482	1.18	2,508	1.31	7,526	1.43	13,085	1.33	29,167	1.24
서부	1,253	1.00	1,917	1.00	5,273	1.00	9,828	1.00	23,482	1.00

자료: 중국통계연감.

<그림 1> 지역 간 소득 추이

단위: 위안



자료: <표 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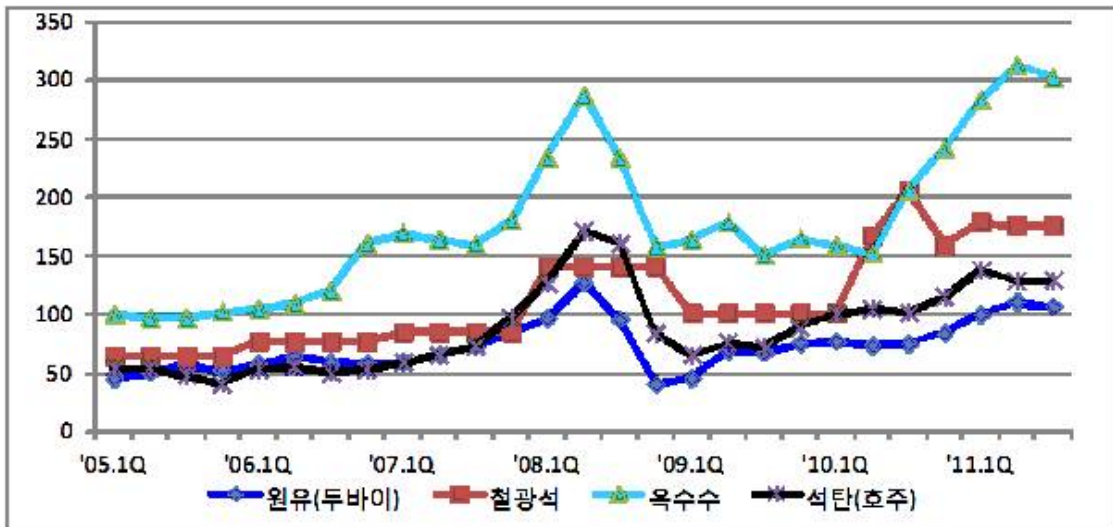
□ 중국의 양적 성장으로 세계 자원가격 상승 압박

- 효율성 개선보다는 생산량 확대에 치중하는 한편, 중복과잉 투자로 자원 수요가 증가하여 세계 자원가격 상승을 견인

<그림 2>

세계 자원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자료: IMF.

□ 기존 성장방식으로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

- 중국은 2010년 1인당 GNI가 4,270달러로 세계은행 기준 중진국(upper middle income group)으로 분류되었으나, 기존 성장방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고소득국가로 진입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질 가능성이 상존

* 중진국의 함정 : 1960~70년대 남미와 아시아 101개 국가가 저임금과 해외기술 이전을 통해 중소득국으로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이후 신 성장동력과 기술혁신 미흡으로 소득이 정체된 현상. 이들 국가 중 최근까지 고소득 국가로 성장한 나라는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 불과



II. 향후 중국경제 트렌드와 신 성장전략

1. 향후 중국경제 트렌드

□ 경제성장률이 2030년 5%까지 감소

- 농업에서 공업으로 성장전환 진행,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성숙 기술 사용으로 총요소생산성 (TFP) 향상 둔화 등으로 향후 20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표 3> 2030년의 평균 경제성장률과 노동력 증가율

	'95-'10	'11-'15	'16-'20	'21-'25	'26-'30
경제성장률(%)	9.9	8.6	7.0	5.9	5.0
노동력증가율(%)	0.9	7.0	-0.2	-0.2	-0.4

자료: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Center.

- 그러나 2030년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1인당 GDP가 16,500달러로 고소득국가(high income economy)에 진입

** 중국 GDP: 2010년 5.9조 달러 → 2030년 21조 달러
 미국 GDP: 2010년 14.6조 달러 → 2030년 21조 달러

□ 수출중심 성장에서 서비스를 포함한 내수중심 성장

<표 4> 중국경제의 구성요소 비중변화 추이

단위: GDP대비 %

경제구조	'95-'10	'11-'15	'16-'20	'21-'25	'26-'30
투자	46.4	42	38	36	34
소비	48.6	56	60	63	66
제조업	46.9	43.8	41.0	38.0	34.6
서비스업	43.0	47.6	51.6	56.1	61.1

자료: <표3>과 같음.



-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7%('10)에서 66%('30)으로 증대되는 반면, 제조업 비중은 46.9%('10)에서 34.6%('30)으로 감소하고, 상품수지흑자규모도 축소

□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와 자본자유화 가속

-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해외 M&A가 지속되는 등 해외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
- 자본자유화와 고수익 추구로 인한 자본유출로 자본수지가 적자로 전환

□ 환경과 자원을 고려한 녹색성장으로 에너지와 자원수요 증가 둔화

- 제조업 비중 감소와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자원다소비산업이 위축
- 교육수준 향상으로 기술집약적 산업이 발전하는 등 혁신 진전

□ 소득불균형 현상 완화

- 중서부지역 발전, 도시화 진전 (도시 거주인구 연 1,300만 명 이상 증가),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농촌대비 도시소득이 '10년 3.2배 → '30년 2.4배로 축소

2 고소득국가 진입을 위한 신 성장전략

□ 정부역할 축소 및 민간부문 강화

- 경제활동의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투명성과 독립성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의 감시자 역할에 주력
- 이를 위해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다변화를 통한 소유와 경영 분리원칙 확립, 국방 등 필수분야 외 정부지분을 축소하고 공공재 공급의 정부독점 완화, 정부의 국유기업 소유구조 개선 등을 추진



- 국유기업의 1/4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경영이 만연. 국유기업의 생산성 개선이 민간기업의 1/3에 불과
- 정부와의 유착에 따라 부정부패 우려
- 국유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의 성장이 지체되어 2011년 포춘(Fortune)지 선정 Global 500에 포함된 61개 중국기업 중 민간기업은 3개에 불과

□ 노동·자본·토지 등 요소시장 개혁

- 노동시장 : 호구제도를 개혁하여 차별 철폐하고, 퇴직연령 연장(현재 남성 60세, 여성 50세)하여 노령화에 대비
 - 중국은 1958년부터 호구등기조례를 통해 농촌주민의 도시이주를 엄격히 제한함. 현재까지 농촌호구 소지자의 취업, 주택, 교육, 연금 등에 대한 차별대우가 존재
 - 2015년부터 경제활동인구(16세-65세) 감소하고, 노령인구(65세 이상) 증가
- 자본시장 :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자본 시장을 선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이자율 자율화, 환율 변동성 확대, 외환보유고의 독립적이고 효율적 관리,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
 - 중국은 국유은행 주도(국유은행의 대출이 전체 위안화 대출의 55.2%), 정부의 강력한 개입, 이자율 제한 등으로 전략부문에 재원을 집중하여 경제발전을 이룩
 - 그러나 민간부문의 금융접근 제한, 저금리로 인한 과잉투자,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우발채무 증가, 금융구조의 복잡성에 대한 대응 미비 등으로 전체적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증가되는 부정적 측면도 내재



- 토지시장 : 지방재정의 토지매각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토지 보상 가격의 현실화 필요. 이를 위해 정부는 농민의 농지보유기간 보장,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 신설,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등 추진
- 개발과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정부의 임의적인 농지매매와 보상미흡이 농민들의 반발과 시위로 이어져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

□ 산·학 R&D협력 강화

-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산·학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한편, 글로벌 연구개발 네트워크에도 연계
- 중국의 과학기술역량은 지속적으로 강화 (GDP대비 R&D 지출금액이 2001년 0.95%→2009년 1.7%로 증가) 되고 있으나, 혁신의 방향이 시장의 니즈(needs)와 괴리되는 경향
- 정부와 국유기업 중심의 연구수행과 폐쇄적인 연구문화가 주된 원인
- 지적재산권 확립, 대학교육 강화, 벤처캐피탈 양성제도 마련 등의 혁신 환경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R&D지출에 대한 면세 등 경제적 유인책 강화

□ 녹색성장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양적투입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새로운 에너지확보, 도시환경 개선, 농업생산량 증대, 전통산업의 효율 개선 등을 위해 녹색성장 추진
- 중국은 수력, 풍력, 태양광, 셰일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2005년 이후 이를 활용한 발전용량이 세계 최대
- 혁신 환경을 조성할 경우 산업의 기술수준 향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에너지 관리 등 녹색 서비스분야 시장도 확대 전망
- 현재까지 정부가 규제와 벌금에 집중하고, 정부개입에 따른 자원가격 왜곡으로 에너지 낭비와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는 등 정책효과가 미미



- 원자재 가격을 현실화하는 한편, 세금, 사용료, 허가권, 거래권, 환경인증 등의 시장친화적 인센티브 추진 필요. 수출 증치세 환급과 환경오염 유발산업 지원의 폐지 등과 함께 에너지 효율기준 상향조정 등 기술 규제 책 도입

□ 교육·의료·연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

- 2020년까지 중·고등학교 진학률을 90%까지 높이는 등 공교육을 확대하고, 의료보험 확충,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 증설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하여 차별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공공 서비스 확충
 - 농촌지역의 중·고등학교 진학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저조하고, 의료비의 1/4이상이 과다 청구. 특히 의료분야는 종합병원 의존도가 커 병원 이용객 수가 OECD평균의 2배에 육박

□ 재정시스템 개혁

- 비대칭적인 재정구조를 개선하여 상·하위 정부 간 재정이전을 법제화 하고, 재정 지출에 대한 책임을 상위 정부가 공유
 - 현재 중국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 등 정부지출의 80%를 책임지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은 40%에 불과
- 인프라투자 등의 대규모 정부지출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각 분야 ('30년까지 교육: GDP의 1~1.5%, 의료: 2~3%, 연금: 3~4%) 지출 확대

□ 세계경제와의 통합 강화

- 교역 확대, 자본계정 자유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과 긴밀히 통합하고 위안화 국제화 추진



Ⅲ. 시사점

□ 녹색성장산업 분야 진출기회 모색

- 중국정부가 2007년부터 풍력, 원자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오폐수처리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관련산업 분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
- 녹색성장산업이 정책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진출이 바람직

□ 제조업분야 구인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진출기업의 주의 필요

- 균형발전, 노동자의 권익 강화,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비교우위가 점차 사라질 전망
- 특히 최근 농민공의 동부 연해지역 유입이 감소함에 따라 저임 노동력 활용을 목적으로 진출 시 주의가 필요

□ 내수시장 확대에 대비 적극적인 중국진출 바람직

- 중산층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주택 등의 내구재 수요는 물론 소득증가로 고급 소비재 수요도 증가
- 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세에 대해 법인세 감면, 토지사용세 면제 등의 각종 우대정책을 제공함에 따라 이 지역의 소비시장도 더욱 확대될 전망

□ 서비스 분야 진출기회 확대

- 중국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비스분야 M&A를 통해 미래의 성장기회 포착 가능



- 중산층이 증가하고, 대학 진학률이 상승함에 따라 교육 등 문화·컨텐츠 분야 수요도 증가
- 농촌지역 지원과 내수촉진정책으로 소액신용대출, 신용카드 등 다양한 소비자 금융서비스의 수요 증가
- 복지제도 확충으로 개인 및 기업의 보험 산업과 의료·실버산업 성장
- o 한중 FTA로 제조업 분야 교역이 더욱 증가하는 한편, 서비스분야 개방으로 법률·컨설팅 등 고급 서비스시장 진출기회도 풍부

□ 중국기업을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혁신환경 조성

- o 중국의 기술수준 향상을 주시하고, 우리나라도 인력 및 기술보호 강화 및 벤처기업 지원 등으로 경쟁에 대비

□ 중국 자금유입 확대방안 및 대비책 마련

- o 우리나라의 미국, EU와의 FTA로 중국 제조업분야의 국내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필요
- o 또한 위안화절상으로 인한 구매력 상승, 자본시장의 점진적 개방, 구미권 중심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추진 등으로 중국자금의 국내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중국자금의 국내채권 및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비할 필요

문의: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조사역 강수연 (3779-5716)
sykang@koreaexim.go.kr